

(표지)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 회의자료

- 녹색생활·교육 /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

2011. 11. 28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1.11.28(월), 15:00~16:40, 정부중앙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국무총리,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 총 32명
- 안 건:
 - ① 녹색생활·교육분야 이행점검 결과보고
 - ② 지방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
 - ③ 제1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 후속조치 추진현황(서면보고)
- 회의 순서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5:00~ 10'	생생도시 시상식	장소: 접견실
15:10~ 5'	국무총리 모두 말씀	* 9층 대회의실
15:15~ 80'	안전별 보고 및 토론	
~16:35	1. 녹색생활·교육분야 이행점검 결과보고(15')	관계부처 합동 (교과부, 환경부)
	15' ① 종합보고 (녹색위 기획단장, 9') ② 부처별 이행계획 보고 (2개 부처, 6')	
	35' 참석자 토론	
	2. 지방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15')	(수원시, 증평군, 대전 서구)
15' ① 우수사례 발표 (3개 지자체장, 9') ②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행안부, 6')		
	15' 참석자 토론	
~16:40 5'	국무총리 맺음 말씀	

(황색 간지)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 회의자료

- 녹색생활·교육 /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

2011. 11. 2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강화 방안

1.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 1
2. 부처별 추진목표 및 조치계획 21

II. 지방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

1. 지방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 39
2.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43

III. 제1차 이행점검 후속조치 추진현황 (서면)

1. 공공건축 이행점검 후속조치 59
2. 그린카 이행점검 후속조치 71

(하늘색 간지)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강화 방안

- 녹색생활·교육분야 이행점검 -

2011. 11. 28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순 서

I. 점검 배경	3
II.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4
1. 종합 평가	4
2. 분야별 평가 및 개선 방안	7
가. 인식 개선	7
나. 생활 실천	13
III. 향후 조치계획	19

I. 점검 배경

□ '08.8월 녹색성장 비전 선포 후 교과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6차례에 걸쳐 녹색생활·교육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추진

* 저탄소생활기반 구축방안('09.1, 1차 녹색위보고),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방안('09.8 5차), 녹색생활실천 확산방안('09.8 5차), 녹색교통 추진전략('09.11 6차)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10.2 7차), 생활속 녹색문화 확산방안('11.6 11차)

- (인식개선) 학교 녹색성장교육, 그린캠퍼스, 범시민교육 및 대국민홍보
- (생활실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린카드 등 녹색소비 확산, 물·전기·교통 수요관리 등

□ 그 결과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녹색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

- 그린카드 확산 등 일부 기업과 국민의 행태에서도 진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국민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과 실천까지는 이르지 못해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 '11.1 국민인식조사(녹색위): ①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알고 있음 90.4%, ② 관련정책 강화 필요 72.1%, ③ 녹색생활 실천중 8.6%

- 온실가스의 43%가 가정·교통 등 非산업분야에서 배출되므로 유아기부터 녹색생활이 체득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전문가·현장책임관 간담회(4회), 관계부처 협의(3회), 지역 현장점검(6회), 지역 녹색성장위원회 간담회(5회) 등을 통해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제시

Ⅱ.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1 종합 평가

- 인식개선과 생활실천 분야의 12개 과제에 대한 점검 결과,
 - 범시민 실천교육과 물수요 관리는 목표와 이행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 전기·에너지 절약은 11.10일 발표한 『전력수급 및 절약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
 - 학교 녹색성장 교육 등 9개 과제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나, 성과는 당초 기대수준에 못 미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성과 부진은 다음의 원인에 주로 기인
 - ① (목표) 단기·중장기 목표가 부재하여 성과관리가 부실
 - 구체적 목표 설정이나 성과 도출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투입 위주로 사업을 추진
 - (예) 전기절약, 물절약 부문은 구체적인 자원절감 목표가 부재하거나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설투자에 치중
 - ② (추진체계) 부처간 협조 미흡
 - 각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연계하지 않고 추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미흡
 - (예) 환경부, 교과부가 각각 그린캠퍼스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

③ (사업내용) 녹색생활 여건 조성보다는 캠페인에 치중

- 인센티브·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으로 뒷받침하기보다는 도덕적 권유나 당위성 홍보에 의존

(예) 범 시민 녹색생활 실천 교육

□ 목표, 추진체계, 사업내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보완 필요

① (목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분기별로 성과 관리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비와 음식물쓰레기, 전기절약 등 단기 성과시현이 가능한 과제는 내년말까지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집중관리
 - 유아에서 대학생·시민에 이르는 국민의 인식 틀 개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 전기절약 캠페인 등
- 녹색소비·자원절약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② (추진체계) 주관 부처를 지정하여 역할을 명확히 설정

- 유사 중복사업은 주관 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하거나 유기적으로 연계

③ (사업내용)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실효성 높은 사업을 추진

-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추진
- 쉽게 이해하거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나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 마련

참고 1 | 녹색생활 · 교육 점검대상 과제

□ 12개 과제 중 9개 과제는 정상추진, 3개 과제는 보완필요

분야	세부과제 및 주요내용	추진 상황	담당 부처
(I) 인식 개선	① 유·초·중·고 녹색성장 교육		
	① 정규 교육과정 및 학교밖 체험교육 강화 ② 교원 연수 강화 및 교육컨텐츠 개발·공유	(정상) (정상)	교과부 교과 환경
	② 대학 녹색성장(그린캠퍼스) 추진		
	③ 그린캠퍼스 활성화	(정상)	교과 환경
	③ 범시민 교육 및 홍보기반 구축		
	④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 교육 ⑤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보완필요) (정상)	교과 환경 환경부 등
(II) 생활 실천	① 에너지·자원 절약		
	⑥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⑦ 물수요 관리 종합대책 추진 ⑧ 전기 및 에너지 절약 ⑨ 종이문서 줄이기 ⑩ 자가용 승용차 이용 줄이기	(정상) (보완필요) (이행철저) (정상) (정상)	환경부 환경부 지경부 지경부 국토부
	② 녹색 소비 확산		
	① 녹색생활 인센티브 확산 ② 녹색제품 인증제 확대	(정상) (정상)	환경·지경 환경부

2 분야별 평가 및 개선 방안

가. 인식 개선

- ◇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녹색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재, 교사연수,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강화
 - 대학은 지역 녹색교육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린캠퍼스 추진을 적극 지원
- ◇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언론사 등이 녹색생활 확산에 협력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형성과 지원인프라 확충에 중점
- ◇ 유·초·중·고(K~12)와 대학 녹색교육은 교과부, 시민인식 개선은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책임을 명확화

1. 녹색성장 교육 강화 : 유·초·중·고

□ (교육과정) 초·중등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내용이 반영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개선의 여지

① 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유아단계의 프로그램 부족

→ 어린이집, 유치원의 만5세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 '11.9월 발표)에 따라 '12.1월까지 녹색교육내용을 교재에 반영

- 유아용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여 내년 6월까지 전국 유치원(84백개)에 보급하고, 유치원교사에 대한 연수를 순차적으로 실시('12.1월~, 교과부)

② 체험 교육이 초기 단계여서 지원 확대 필요

→ (a) 창의체험활동시간용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 * 교과부의 녹색교육 체험학습정보 456종('11년) ⇒ 700종('12년)
- * 환경부의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90건('11년) ⇒ 200건('12년)
- * 녹색성장분야를 포함한 중·고등 진로진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b) 수학여행·수련회 등을 녹색 체험형으로 전환 유도

- * 지역별 녹색성장체험명소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창의체험 지원센터 활용)
- * 교과부 특별 교부금 시책사업(창의인성, 진로·유아교육 등)에 녹색체험포함
- * 수자원, 환경생태 체험교실 등 4대강 16개보 홍보관을 활용한 녹색 체험프로그램 확충(수자원 공사)

(c)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어린이·청소년 동아리(SESE나라)에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확산 지원(에너지관리공단)

(d) 노후 학교를 그린스쿨로 개선할 경우, 에너지절약 체험 시설이 포함되도록 그린스쿨 시설 가이드라인을 개선

□ (교재) 초·중학교 과학, 사회, 기술·가정, 도덕과 고교 과학, 사회에 녹색성장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확산 필요

→ (a) 국어·영어 등의 주요 교과서에 반영하고, 평가시 지문 등으로 활용 권장

- * 금년 8월 발표한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개발 중인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내년말까지 교과서를 개발하고 '13년부터 보급
- * 각 시도별 교과연구회 지원시 녹색성장교육 분야 10%이상 반영 권장

(b) 교육시간 분량과 학생수준에 맞춘 콘텐츠 개발·보급

(c) 녹색학습교안(교사), 동영상·애니메이션 등(학생, 성인)의 공유·확산이 용이하도록 '환경교육포털'(환경부) 및 '창의인성교육넷'(교과부) 사이트 개선 및 연계

- * 에너지관리공단 관련자료 등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등재·보급

□ (교사연수) 교장·교감 등 자격연수에 녹색성장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켰으나('09년), 신입교사·기존 교장의 연수는 미미
* '11년 자격연수 21,814명·직무연수 26,551명, '10~'11년 교장·교감특별과정 627명

→ (a)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공통 과정에 환경·에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권장

(b) 녹색교육 핵심교원 연수를 대폭 확대('11년 100명→'12년 1,000명), 필요시 해외 시찰도 실시

(c) 환경인력개발원의 교장·교감 특별과정 확대(연 300명→500명), 교육과학연수원의 교장·교감연수 과정 신설 추진

□ (평가체제) 녹색교육 실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교원연수참여율,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등 15개 지표를 평가하고 있으나, 녹색교육 등은 미반영

→ 녹색교육 실적을 시·도 교육청 평가 요소로 반영하여 특별 교부금을 차등 지원

(교과부, '12년 상반기 평가지표 개발, '13년 평가부터 시행)

□ (지원체제) 각 지역 유관 기관간 협력이 미흡

→ 교육청·지자체·지역 언론·지역녹색성장위원회·에너지관리공단간 에너지절약 인식개선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지역별 실천 네트워크 구축·협력 강화

· 지역녹색성장위원회가 협력체제 구축·운영에 중심적 역할 수행(녹색위)

* 현재 5개 교육청(경기·대구·대전·광주·경남)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 16개 전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에너지관리공단 등)

2. 녹색성장 교육 강화 : 대학

□ (대학) 대학의 자발적인 그린캠퍼스 운동이 추진 중이며, 정부도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

- *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08.11. 61개대)를 비롯해 지역별 그린캠퍼스 협의회 구성(경기 '10.3, 부산 '10.11, 충북 '11.11)
- * 대학의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개발('10년 서울대) 및 확산 ('11년 10개 대학 교과과정 개발중)
- * 환경부 주관으로 그린캠퍼스 10개를 선정하여 지원('11.8)
- * 교과부는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인가 및 지정
- 충남대 등 7개 대학원 신설인가, 서울대 등 3개 전문대학원 지정

① 유사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흡

→ 교과부가 연구·검토한 대학 '그린캠퍼스 인증도입방안은 환경부의 그린캠퍼스 선정제도(대학 신청시 지정)로 일원화

- 선진국의 우수제도(美 Sustainability Tracking Assessment and Rating System 등)를 벤치마킹하여 종합·분야별 국내 평가지표 마련

② 대학 자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

→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지원을 확대

(a) 대교협, 전문대협, 그린캠퍼스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선도사업을 발굴·추진(교과부)

- * 교과부 주관으로 협의회 구성 (대학협의회 사무총장, 관계부처 국장 등)

(선도사업 예시)

- * 그린캠퍼스 책임관 지정 등 추진조직 정비
- * 물·종이 등 자원절약운동 추진(절감액은 학생에게도 일부 환원)
- * 탄소제로 강의동 건축 및 대학내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인벤토리 구축
- * 전기차 보급 등 녹색기술 체험기회 부여

- (b) 대학교협의 교양교육센터에서 대학교양과목으로 녹색성장 과목을 개발하여 보급
- (c) 그린캠퍼스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우수 사례 정보공유 강화
 - * 온라인 사례제공, 경진대회, 우수사례발표대회 등 개최
- (d) 대학의 정보공시제도에 그린캠퍼스 녹색지표를 반영하여 그린캠퍼스 운동 확산 유도
- (e) 그린캠퍼스 녹색생활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취업·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대학에 권고

3. 범시민 교육 · 홍보기반 구축

- (시민 교육)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대규모로 실시하였으나, 지원 인프라는 부족
 - * 환경부는 환경교육홍보강사단(300명)을 구성하여 학교, 기업 및 군부대, 예비군 등 대상 녹색교육 실시 (연간 50만명)
 - *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녹색교육을 실시하는 「녹색교육기관(한국생산성본부 등)」('10~'11, 전국 64개 지정)에서 2년간 27만명 교육

→ 지역별 교육거점 · 전문가 DB 등 인프라 확충

- (a)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환경교육센터를 지역별 녹색교육 거점으로 지정(12년 신규 16개)하고, 녹색위의 녹색교육기관 지정업무도 환경부로 이관하여 일원화
- (b) 지역대학 그린캠퍼스를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평생 교육강좌 개설, 녹색체험프로그램 운용

- (c) 녹색 전문가 DB를 내년 중 3,000명 수준(현재 300명)으로 확대하고, 녹색위 홈페이지를 정보공유 포털사이트로 운영(11.12월)
- (d) 정부와 NGO간 협력을 위해 ‘**민관 녹색생활실천 협의회**’ (환경부 차관주재, 주요 NGO대표, 부처 실장급) 운영 (12.1분기~)

□ **(대중매체 등 활용)** 방송·언론 협력 공동프로그램 제작·송출, SNS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대중매체 활용을 높였으나,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미흡

- (a) **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소재로 녹색생활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송작가 등에 대한 홍보 강화(녹색위)**
- * 방송작가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로 대화 형태의 자료를 작성·보급
- (b)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SNS 등을 통한 실시간 홍보 및 정보 제공 강화**
- * 녹색성장위원회 페이스북 교감 활동지수 5천명(現 3천여 명), 트위터 팔로워 5천명(現 1천여명) 확보 목표 (11.12월, 녹색위)
 - * '12년 말까지 주요 SNS 채널 내 5만명 이상 팔로워 확보 추진
 - * 전국 녹색성장 관계자(지방녹색위 위원, 공무원, 시민단체·언론 등) 대상으로 e-mail list를 작성, 정부 발표 보고서 등을 즉시 송부
- (c) **‘녹색생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녹색생활을 ‘새로운 멋과 문화’로 확산 유도**
- * 녹색생활 실천 경험담, 혜택 등 공유
- (d) **기후변화주간, 녹색소비주간, 에너지의 날 등을 계기로 각 부처·기관의 녹색성장 홍보와 캠페인을 집중 추진**
- * (예) 금년 4월, 지구의 날을 계기로 관계부처, 지자체, NGO에서 750개 행사를 집중 개최하는 ‘지구를 위한 1주일’ 시행

나. 생활 실천

- ◇ 국민들이 쉽게 절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도덕적 권유보다는 국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절약과 녹색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 기반 정비
- ◇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성과 관리
 - 음식물쓰레기·전기·물·수송용 연료사용량 등 분야별로 '12년말, '15년, '20년 등 단계별 감축 목표(추세 대비) 설정

1. 에너지·자원 절약

□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감축목표가 달성되도록 지자체별 감축 성과를 점검·독려할 필요

- * '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20% 감축('10.2,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 '15년까지 30% 감축 목표 설정

① '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의 30%를 배출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결과 추세 대비 20~46% 감량 효과
- * 다량배출사업장(집단급식소, 음식점,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은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처리 또는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식당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축소(125㎡이상→200㎡ 이상 식당) (환경부, '12 상)

- *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음식점이 69,000개→ 30,000개소로 축소

②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제 등은 부재

- (a) **쓰레기를 줄이는 조리법에 대한 연구·경연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학교급식 → 단체급식으로 확산 (농림, 교과, '12 상)
- (b) 음식물쓰레기를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아파트 대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 처리시스템(분쇄·감량 등) 도입방안 연구**
- (c)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시범지구(제주도) 조성**(환경부, '12~)
- (d) 절감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측정·보고·검증 체제 구축

□ (전기) 절약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약의 여지가 아직 많은 상황

① **금년 동절기에 전기부족이 우려되므로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

- (a) **매년 방학 전마다 유치원, 초·중·고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절약 특별 교육 실시** (교과부, 시도교육청 협조)
- * 단전피해와 녹색생활 관련 시청각 자료 제공(에너지관리공단 협조)
 - * 학교별로 어린이 절전점검단 운영
 - * 교과부, 시·도 교육청 지침 시달(12.2) → 교육청별 교·강사 확보 및 사전교육(12.10) → 시청각자료 제작·배포(12.15) → 교육실시(12.16~)
- (b) **에너지절약체험을 방학숙제로 권고하고, 가정의 에너지 감축 실적에 따라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표창 실시**
- * 교과부 방침 시·도 교육청 시달(12.10)
- (c) **학생, 주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공모 실시** (제도 개선 등과 함께 구체적인 절약사례도 신청가능)
- *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계획 수립 후 1월 말 결과발표

(d) '나의 절전 계획서' 실천 사례 홍보·확산

-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 사례(내복 착용,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를 공감코리아 등을 통해 확산 → 공무원의 동참 유도 →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일반대중에 확산
- * 총리실을 시작으로 지경부 등 관계부처가 12월부터 순차적 게시 (공감코리아에 소개코너 신설)

(e)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 랜드마크 건물의 절약실적을 시민 단체 등과 함께 점검·홍보하고 절전 캠페인 확산(지경부)

- 에너지 다소비 건물, 정부청사, 대단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발굴
- * 동절기대책기간 중 시행 후, “에너지절약 성과보고 대회”시 포상

②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나 대상 제품 확대 필요

→ (a) 대기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품이나,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을 에너지효율관리 제도에 편입 (지경부)

- *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열보드, 시스템에어컨 등에 대해 에너지 비용 표시제 적용(29→36제품, '12.4)
- * LED 가로등 등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 적용(36→40제품, '12.4)
- * 디지털 컨버터에 대해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적용 (22→23제품, '12.6)

(b) 에너지 효율관리 기준 개선 (지경부)

- * 컴퓨터 대기모드의 에너지효율기준 개선(美 Energy Star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준비(sleep, idle) 상태도 효율 계산시 포함) ('12.4)

(c) 연말연시 이웃돕기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으로 제공 권고(복지부, 11.12~)

③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이 미흡

* 에너지효율개선 예산 6천억원중 전기절약 관련은 5~10%에 불과

→ 전기절약 비중을 확대하고, 냉난방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사용 과다 제품의 절약 기술 개발 추진

④ 정부부처의 에너지절감 지원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처별 에너지절감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평가 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 (녹색위 주관, 각 부처, '12.3)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지원'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실시 (기재부)

⑤ 저소득층이 에너지 문제에 더욱 취약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노후주택 집중개량*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에너지 효율개선 집중지원 (국토, 지경, '12~)

* 주요사업: 창호개선, 단열,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지원

* 사업규모: ('11) 523억원, 7.1만 가구 → ('12) 639억원, 8만 가구

□ (물)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07~'16)」에 따라 시·도별로 지자체가 물 수요를 관리중이나, 절감 실적 부진 ('10년 목표대비 70% 수준)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 수도사업 (정수장 확장 등) 인가를 제한하거나 국고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이행방안 마련(환경부·국토부, '12 상반기)

□ (종이) 기업-기업간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추진('11년 5개 기업), 관련법령 개정 추진 등 온라인 문서 활용 확산 노력은 지속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문서 사용 절약 노력은 미흡

*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확대('전자서명법' 개정안, '10.12 국회제출), 전자문서 기술의 법적 효력 인정('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11.10 국회제출) 등

→ (a) 종이문서 줄이기는 공공부문이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과 행태를 개선(행안부, '12상반기)

(예) 전산화된 지출결의서를 인쇄하여 보관하는 행태 등

(b) 민간부문에서도 전자문서 보관시, 종이문서 원본폐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 예정(법무부, '12상반기)

□ (교통)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우선구역, 혼잡통행료 등 도시내 승용차 이용제한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지자체의 낮은 관심으로 실제 적용은 미흡

* 혼잡통행료는 '96년 남산1·3호터널에 도입된 이후 추가지정이 전무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전국에 2개소(대구·부산)만 지정된 상황

→ 도시내 승용차 이용제한 제도 실행 여부를 지자체 합동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자체의 교통수요 관리 유도 (행안부, 국토부 '12.6)

□ (지역녹색성장) 지역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이 미흡

→ 내년도 지역녹색성장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전기절약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중점 추진(행안부, '12.1)

· 지역별 목표·구체적 추진계획을 내년도 지역녹색성장 정책에 반영하여, 연말에 추진 실적을 평가

· 행안부의 지역녹색경쟁력 평가시 높은 가중치 부여

2. 녹색소비 확산

□ (인센티브) 탄소포인트제도, 탄소캐쉬백 제도, 그린카드 등을 도입하였으나 확산 노력이 미흡

* 탄소포인트제('09 도입): 전기·가스·수도 사용을 감축할 경우 지자체가 일정금액을 상품권 등으로 제공('10년 182개 지자체 54만 세대 3,608백만원)

① 탄소캐쉬백 참여기업(33개) 및 품목(18개)이 적어 이용에 한계

* 탄소캐쉬백제: 고효율·저탄소 녹색제품 구매시 포인트를 제공(총 34개 기업, 18개 품목 358종 참여)

→ TV, 타이어 등 소비자 체감이 큰 품목 제조업체 대상으로 탄소캐쉬백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상확대('12.1월, 에관공)

② 그린카드는 '11.7월 도입 후 발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카드와 연계되지 않고 별개로 발급되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타 인센티브 제도와의 연계 필요

* 그린카드: 대중교통이용, 녹색제품(환경마크, 탄소라벨링) 구입시 할인 혜택 제공 ('11.11월 현재 45만건 발급)

→ (a) 그린카드는 현재와 같이 별도 카드로 이용함은 물론 기존카드와도 연계하여 다른 혜택대신 그린카드 혜택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환경부, '12.3)

(b) 탄소캐쉬백도 그린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환경부, '12년~)

□ (녹색제품 소비유도) 탄소라벨링, 저탄소제품인증 등 녹색제품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소비확산에는 한계

*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10년 301개→'11년 500개)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04년 1,536개→'11년 7,593개), 저탄소제품 인증제 신규 시행('11년 30개)

→ (a)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등 저탄소제품 확산 추진(농림부, 환경부, '12.1)

(b) 공공기관 승용차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토록 권고하는 등 공공기관·사회지도층의 녹색소비 유도('11.12)

Ⅲ. 향후 조치계획

◇ 발표한 대책을 현 정부 기간내에서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독려

- 내년도 녹색성장 분야 특정과제 평가시 중점 점검 (총리실, 녹색위)
 - 녹색교육 기본틀 완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 전기 절감 대책 등
- 각 부문 대책의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상황을 점검 (상세 일정: 참고)
 - ('11년말까지) 겨울방학전 특별교육 실시 등
 - ('12.1/4까지) 주요 분야별 절약 목표와 세부 실천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전기 부문은 '12.6월까지) 등
 - 전기·에너지, 물·자원절약은 NGO의 참여와 역할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 구축
 - ('12.2/4까지) 컴퓨터, 시스템에어컨 등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품목 확대 등
 - ('12.4/4까지) 고교 국어 등에 녹색성장내용 반영 등

참고 2 | 녹색생활·교육분야 과제별 추진 일정

개선 조치사항	조치 기한	주 관부처 (협조부처)
① 인식 개선		
① 녹색성장 교육강화 : 유·초·중·고		
- 교장·교감 연수체계 개선	~'12.1/4분기	교과부 (환경부)
- 녹색교육 실적 평가체계 구축	~'12.2/4분기	교과부
- 유아용 교육·초중등 체험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시행	~'12.2/4분기	교과부 (환경부)
- 초중고 교과서에 녹색성장 내용 반영	~'12.4/4분기	교과부
② 녹색성장 교육강화 : 대학		
- 그린캠퍼스 선정제도 일원화	~'12.1/4분기	환경부 (교과부)
- 그린캠퍼스 추진협의회 구성 및 선도사업 실시	'12.1/4분기~	교과부 (환경부)
- 대학 정보공시제도에 그린캠퍼스 지표 도입	~'12 3/4분기	교과부
③ 범시민 교육·홍보기반 구축		
- 민관 녹색생활실천 협의회 구성·운영	'12.1/4분기~	환경부
- 지역 녹색교육 거점 구축(환경교육센터)	~'12 3/4분기	환경부
② 생활 실천		
④ 에너지·자원 절약		
- 방학전 에너지 및 자원절약 특별교육 실시	~'11.12	교과부
- 동절기 대형건물 에너지 절약실적 점검·홍보	~'12.1/4분기	지경부
- 전부처 에너지절감사업 분석·평가·조정	~'12.1/4분기	녹색위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관련 주요 재정사업 심층평가	~'12.2/4분기	기재부
- 공공기관 종이문서 서식정비	~'12.1/4분기	행안부
- 음식물쓰레기·전기·물·수송용연료사용량등 분야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12.2/4분기	환경· 지경·국토
- 도시내 승용차 이용제한 실행여부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에 포함, 교부세 반영 등	~'12.2/4분기	행안부
- 에너지효율관리 대상품목 확대	~'12.2/4분기	지경부
- 다량배출사업장(음식물)중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 대상 확대	~'12.4/4분기	환경부
⑤ 녹색소비 확산		
- 공공기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토록 권고	'11.12	관계부처

(하늘색 간지)

**녹색생활 · 교육 분야 이행점검
부처별 추진목표 및 조치계획**

2011. 11. 28

교육과학기술부 환 경 부

순 서

I. 교육과학기술부 23

II. 환경부 30

I. 교과부 (녹색성장교육 강화)

<점 검 결 과>

- (총평)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09. 8)에 따라 2010년, 2011년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연수 등 녹색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2년부터는 체험과 실천위주의 녹색교육 확산·정착 본격 추진
- 녹색성장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 녹색분야 부분 교육과정 개정('10.1), 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시 녹색교육 반영*('11. 8)
 - * 영어, 사회, 과학, 도덕, 기술·가정 등의 교과에 녹색성장교육 내용 반영
 - '환경'과목을 '환경과 녹색성장'으로 확대·개편('10~'11)
 - 현행 교과서 개정 뿐 아니라, 2013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도 녹색성장 교육 반영 지침
 - * 현행 교과서 개정('09. 9), 녹색분야 부분 교육과정 개정('10. 1)에 따른 교과서 수정('11. 8~, 초·중·고 도덕, 사회, 과학, 실과/기술·가정)
- 녹색성장 교원 연수체계 구축
 - 교(감)장 등 자격연수 내 녹색성장 교육 필수 반영('09)·시행 및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교원연수 실시(연 5만명)
- 녹색성장 선도 교육기관 및 학교안팎 녹색교육 활성화
 - 녹색성장연구학교('09~'11, 150개교), 그린스쿨('09~'11, 136교)
 - 녹색성장 체험자원 확충('11, 456종) 및 프로그램 개발(26종), 녹색성장 첨단기업 교육기부 참여 확대
 - *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대한항공 등 교육기부 MOU체결('11.8월~)
-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1년, 18개 대학) 등 그린캠퍼스 운동 추진
 - 다만, 대학의 그린캠퍼스 확산 지원에는 소홀

1. 13년 2월까지 달성목표와 달성방안

달성목표

- 체험과 실천위주의 녹색교육을 위해 유·초·중등 단계별 학생수준에 적합한 녹색교육과정 운영 ('12년~, 각 학교)
 - 유·초등단계는 "녹색생활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중등 단계는 "녹색 진로교육 및 참여"위주로 운영

- 학교 안팎의 녹색체험프로그램 확대
 - 학교 내 쉽게 적용 가능한 녹색체험프로그램을 학교급별 발굴·보급하고, 녹색교육 전문가의 "찾아가는 녹색교육" 확대
 - 창의인성교육넷 내 녹색체험 자원 확충 및 기업·대학·연구소·지역단체 등의 교육기부와 연계한 녹색체험프로그램 확대
 - * 녹색성장 관련 체험자원(CRM) ('11. 10월) 456종 ⇒ ('12년) 700종
 - * 녹색분야 MOU 기업: ('11. 11월)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 ('12년상반기)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금호아시아나, 한국수자원공사, 두산 등

- 녹색성장교육 교원연수의 확대 및 내실화
 - 녹색 교육과정·교과서를 토대로 교육현장의 수업과 체험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녹색 교원연수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 (중앙) 핵심교원 1,000명('12년) (교육청) 연수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 녹색성장교육 지원체제 구축
 - 시도교육청 단위의 녹색성장교육 지원체제 정비 및 활성화
 - 대학의 그린캠퍼스 추진체제 구축

목표 달성방안

□ 각 학교별 '녹색성장교육 계획' 수립·운영

- '12년도 녹색성장교육 중점 추진 방향 시달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통해 각 학교의 '학교운영계획' 수립 시 녹색성장교육 반영

< 학교급별 녹색성장교육 중점 분야 >

<p>유·초등 (녹색생활습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생활 전반에 녹색성장교육 반영 (수업·체험활동과 연계, 급식·생활지도와 연계) • 가정과 연계한 녹색생활 습관 형성 (주5일 수업에 따른 '가정과 함께하는 녹색체험의 날' 등) 	 [환경학교 체험]
<p>중등(중·고) (녹색진로·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분야 진로교육 강화 (에너지기술전문가, 토양·지하수관리전문가, 환경규제전문가 등) •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참여주체로 활동 확대 (녹색 봉사동아리, 저탄소운동 참여 등) 	 [자전거로 환경정화]

□ 학교 내 녹색체험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학교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녹색체험프로그램을 학교급별 발굴하여 학교 운영계획 수립전('12. 1~2월)에 전국적 보급
 - * (거제 중앙고) 불편한 진실·지구 온난화 6도의 비밀(동영상) + 녹색교실 만들기, 녹색성장 실천사례 발표 등으로 10주(10시간) 녹색창체 프로그램 운영
 - * 초중등 에너지 절약 특별교육 실시(지경부·교과부, '11. 12월)
- 학교급별 교과 연계형 녹색 체험프로그램 개발 ('12년, 200종)
 - * (예시) 초3 과학 '물과 기름' 소단원 - 태안 기름유출 사고영상 + 음식 속 기름제거의 다양한 방법 실험 + 저탄소 녹색조리법 의견 나누기
- 녹색교육 전문가의 '학교로 찾아가는 녹색교육' 확대
 - *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특강(에너지관리공단), 찾아가는 기후학교(충청북도) 등
-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다양장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 * (예시) 그린스타트 운동(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 전국네트워크)

□ 학교 밖 녹색체험 자원 및 프로그램 대폭 확충

- 전국 창체지원센터(88개)를 통해 창의인성교육넷 내 녹색체험 자원 확충('12년 700종) 및 체험자원 프로그램 질 제고
 - * 학생·교사 등 사용자 친화적 환경 조성, 자원·프로그램 실명제 등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단체 등의 교육기부를 연계한 녹색 성장분야 체험프로그램 대폭 확대
 - *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대한항공 등 교육기부 MOU체결('11.9월~)
 - * 삼성엔지니어링(찾아가는 환경교실, 녹색교육콘텐츠(www.e-gen.co.kr) 등),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확대 등)
- 4대강 16개보 홍보관을 활용하여 녹색프로그램 확충(수자원공사)
 - * 16개보 (공통) 수자원·환경생태 체험교실, 상설 녹색체험, 방학중 녹색캠프 (보별 특화프로그램) 이포보-아름답게 설계된 보(과학기술과 예술 융합프로그램), 백제보-역사·문화·과학기술(수문)을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

□ 녹색성장교육 교원연수의 확대 및 내실화

- 체험중심 녹색교원연수 확대 및 중점대상 교원부터 단계적 교육
 - 녹색성장 기업들이 최신콘텐츠와 시설 설비 등을 직접 활용 하는 교육기부형 녹색 교원연수 시행 유도
 - * 삼성엔지니어링 녹색 교원연수('12. 1월), GS칼텍스 녹색교원연수('12년), 한국수자원공사 Project WET(water education for teacher)('12년)
 - 녹색분야 핵심교원 1,000명 양성('12년, 교과부)시 환경교사 이외에 과학·사회·도덕교사 등 유관분야 교사부터 단계적 교육

유·초등(300명)	녹색생활실천 모델, 녹색융합 수업모델 중심 연수
중등(700명)	녹색프로젝트('환경과 녹색성장), 녹색진로교육모델 연수
 - 교(감)장 대상 "녹색성장정책 이해과정" 신규 추진(기존 국가공무원 대상)
- 교원 자격(직무)연수 중 녹색성장정책연수의 질을 제고하고, 시도별 체험위주의 다양한 교원연수 활성화 권장
 - * 녹색위·환경부·에너지관리공단 등의 녹색교육 우수강사풀 제공('12. 상)

□ 녹색성장교육 지원체제 구축

- 교육청의 녹색성장교육 강화를 위해 "녹색선도교육청" 지정·운영 및 시도교육청 평가시 녹색성장교육 지표 개발 및 반영
 - * 시도교육청의 녹색성장교육 실적 및 계획을 심사하여 녹색선도교육청 지정
- 교육청별 지역내 지자체·지방녹색위·환경청·에너지관리공단 등 녹색성장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 대학 그린캠퍼스 운동 확산·정착

- 그린캠퍼스 확산을 위해 대교협, 전문대협, 그린캠퍼스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선도사업 발굴·추진

<선도사업 예시>

- * 그린캠퍼스 책임관 지정 등 추진조직 정비
- * 물·종이 등 자원절약운동 추진(절감액은 학생에게 환원)

- 대학단위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참여대학의 확대
 - ※ 온실가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목표관리 대상학교(서울·연세·한양대 등 18개)에 시범 적용('11년, 18개 → '13년 100여개)
- 대교협 '교양교육센터'에서 녹색성장분야 교양커리큘럼 개발·보급('12년)
- 그린캠퍼스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우수 사례 정보공유 강화
 - * 온라인 사례제공, 경진대회, 우수사례발표대회 등 개최
- 대학의 정보공시에 그린캠퍼스 녹색지표를 반영하여 그린캠퍼스 운동 확산 유도

'10~'11년 녹색성장교육 토대를 바탕으로 유·초·중등, 대학을 포함한 '녹색성장교육 확산·정착 방안' 마련('11. 12월)

2. 세부조치계획

- 방학전 '에너지절약 특별교육' 실시('11. 12, 각 학교)
 - 에너지관리공단의 교육자료의 학교교육 적정성 확인 후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 보급·방학전 에너지절약 특별교육 실시
 - * 방학중 '가정의 탄소포인트 제도' 참가 권장 등 가정의 에너지 실천행동 메뉴얼 보급
- 2012년 녹색성장교육 확산·정착 방안 계획 수립('11.12)
 - 시도교육청 및 각 학교의 '12년도 녹색성장교육 운영 방향 수립·시달('11. 12) 및 교육청별 녹색성장교육 운영계획 수립('12. 1월)
 - *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협의회('11. 12월)
 - 녹색성장교육 선도교육청 지정·운영('12. 2월)
 - * 녹색생활 실천운동, 녹색체험자원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녹색수업자료 개발·보급 등 시도교육청 계획을 평가하여 특별교부금 차등 지원
 - 학교 내 녹색체험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보급('12. 2~3월)
 - * 부처·교육청이 제공하는 녹색성장교육 자료를 학교급별·학생수준별 체계화('12. 8월)
- 녹색성장 분야 교육기부 지속 확보('11.12월~)
 - 기존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금호아시아나, 현대중공업 등의 녹색 교육기부 확보
 - * MOU 예정 : 대우조선해양(12. 1), 금호아시아나(12. 2), 대한항공(12. 5)
- 체험위주의 녹색성장 교원연수 실시('12. 상반기)
 - 삼성엔지니어링 녹색교원연수('12. 1월, 40명)
 - * GS칼텍스,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12월 여름방학 중 실시 예정
 - 녹색교육분야 우수 강사풀 확보(녹색위, 환경부 등) 후 시도 제공('12. 2월)
- 대학 그린캠퍼스 운동 확산·정착
 - 그린캠퍼스 추진 협의회 구성·선도사업 발굴('12. 1월)
 - 대학의 정보공시제도에 그린캠퍼스 녹색지표 반영('12년)

3. 반기별 추진계획

1. '11년 하반기 완료 사항('11.12)
▪ 에너지절약 특별교육 실시('11. 12월)
▪ 에너지절약 실천행동 매뉴얼 보급('11. 12월)
▪ 녹색체험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11. 12월)
▪ '12년 녹색성장교육 정착·확산방안 수립('11. 12월)
▪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녹색성장교육 협의회('11. 12월)
2. '12년 상반기 완료 사항('12.6)
▪ 시도별 녹색성장교육 계획 수립('12. 1월) 및 선도교육청 지정(2월)
▪ 학교 내 녹색체험프로그램 보급(2~3월)
▪ 녹색성장 교육기부형 교원연수(1월, 삼성엔지니어링) 및 추가 확보(지속)
▪ 녹색성장 핵심교원 연수계획 수립(1~2월)·시행(3월~)
▪ 녹색성장 정책 이해과정 신규 개설 계획(2~3월)
▪ 녹색분야 우수강사 풀 확보 및 시도 제공(3월)
▪ 창의인성교육넷 개편 및 각 시도별 녹색학습 지원 점검('12. 6월)
▪ 대학 그린캠퍼스 추진협의회 구성·운영(1~2월)
▪ 대학 그린캠퍼스 공시지표 협의회('12. 상반기)
3. '12년 하반기 완료 사항('12.12)
▪ 교과연계형 녹색수업모델 개발·보급(8월)
▪ 학교급별, 수준별 녹색성장교육 자료 체계화 작업(~8월)
▪ 녹색성장 핵심교원 연수, 녹색성장정책과정(~12월)
▪ 시도교육청 녹색성장교육 추진상황 점검(8월, 12월)
▪ 대학 그린캠퍼스 공시지표 반영('12. 하)

II. 환경부

< 점 검 결 과 >

총평

- '녹색성장' 교재 개발, 우수 체험프로그램 발굴·보급, 대학의 그린캠퍼스 활성화 등 녹색교육과, 그린카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 정상추진 중

녹색성장 교육 강화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동영상, 교재 등 교육콘텐츠 제작, 환경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등 초·중·고 녹색성장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 그린캠퍼스 10대 대학 선정('11.8),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그린캠퍼스' 사업도 정상궤도에 진입
- 다만,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수 체험프로그램 보급·확대, 환경교육포털사이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 교과부, 환경부에 이원화 되어있는 그린캠퍼스 인증·선정사업을 환경부의 그린캠퍼스 선정제도로 일원화 필요

녹색소비 및 자원절약

- 탄소포인트제도, 그린카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회용품 줄이기 등 녹색소비 및 자원절약 유도를 위한 기반 마련
- 향후 녹색생활 실천 유도의 탄력을 가하기 위한 부문별, 단계별 목표 설정 필요

1. 12년말 달성목표와 달성방안

'12년말 달성목표

1	환경교육 150만명 실시
2	그린카드 가입자 100만명 달성
3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BAU 대비 20% 이상 감량
4	수돗물 689백만톤 절약

목표 달성방안

- (환경교육) 실천, 체험형 프로그램 등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발굴하여 보급하고, 정부 및 NGO 간 거버넌스 형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정비 등 범시민 녹색교육을 위한 지원 인프라 확충
- (그린카드) 탄소포인트·녹색소비·대중교통 이용 적립, 공공 부문 할인 등 그린카드의 분야별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
 - 그린카드제 참여유통사 확대(편의점, 중소형마트 등) 및 공공 기관·기업용 법인 그린카드 출시 등 국민 편의성 증대를 통해 실제 녹색생활 참여율 제고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144개 지자체)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종량제 적용 확대·강화
 - ※ 다량배출사업장은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처리(69천개업소, 전체 발생량의 약 30% 차지)
- (물 절약) 노후수도관 개량, 신축 건물 절수기기 설치, 절수형 물사용 기기 보급, 하·폐수 재이용 시행 등 지자체 목표관리제 시행

2. 과제별 세부조치계획

환경교육

□ 초·중등학교 녹색교육 활성화

○ 초등학생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집중 지원

- 운영 성과가 높은 '푸름이' 이동환경교육 사업을 확대(4대 →6대)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 제공('12.11)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인증·보급('12.6)

* 현재 90개 인증프로그램을 '12년까지 200개 이상 확대·보급

-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학생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12~)

○ 모바일 기반 환경교육포털사이트를 구축,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SNS 활용 환경교육사업 발굴, 추진('12.10)

- 환경퀴즈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 어플 제작·보급

○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교구 개발·보급(5종) 등 환경관 형성에 민감한 유아 대상 교육 확대('12.6)

※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취약계층 자녀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중점

□ 그린캠퍼스 운동 활성화

○ 녹색교과과정 개발, 저탄소형 녹색교정 조성 및 녹색생활 실천 등 대학을 녹색인재 양성의 장으로 조성

- 그린캠퍼스 선정대학 대상 녹색생활 실천 수기·아이디어, UCC 공모전 개최('11.12)

- 그린캠퍼스 선정대학 간 성공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선정대학 총장협의체 구성·운영('12.상)

※ 교과부 추진협의체와의 연계방안 마련

- 그린캠퍼스 평가 체계를 마련, 1차년도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평가를 통하여 우수사례 공유·확산('12.하)

□ 범시민 교육·홍보기반 구축

- 국가·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교육사업 수행 등을 전담할 거점기관으로 육성
 - 환경교육센터 기준 및 운영·관리 방안 마련('12.상)
 - 국가 및 시·도별 환경교육센터 16개소 지정('12.하)
- 환경노래, 뮤지컬 등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 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환경뮤지컬(부활-골든데이즈) 제작 등을 문화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11.12~)
- 통·반장, 학부모, 주부 등을 지역사회 녹색생활 실천가로 육성
 - 9개 자연환경연수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교육홍보강사단 인력풀(300명)을 활용하여 녹색생활 실천 교육 주도(연중)
- 분야별 다양한 녹색교육 전문가 등 인적DB 구축
 - 환경교육학과 개설 대학, 교육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 강사 등 인적 자원 파악 및 DB구축('11.12)
- 정부-NGO간 협력을 위한 '민관 녹색생활실천 협의회' 운영('12.1분기)
 - 對NGO협력사업 방향설정 및 발굴·조정, 민관 공동캠페인, 의견수렴 등(환경부 차관 주재, 주요 NGO대표, 부처 실장급 참여)

그린카드

□ 그린카드 보급 확대 및 사용률 제고

- 그린카드 연계 녹색 금융상품 제안공모 추진('12.8, BC·KB카드, 우리·기업·하나·농협·부산·대구·경남은행)
- 공공부문 인센티브 확대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그린카드제 협의회의' 운영(반기별, 16개 광역지자체·참여기업)
 - 지자체 체육·문화시설(주민센터) 그린카드 할인혜택 추진
 - 참여금융기관 대상 연말 실적 평가회 개최(은행·카드사 대상)
 - 유통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대형마트·편의점 등)
- 그린카드 참여기업 추가 협약식 추진(전자제품업체 중심)
 - 친환경 생필품(세제, 용기 등) 제조 중소기업 대상('12.3)
 - 환경마크·탄소라벨링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상('12.12)
- 그린카드 연계 대중교통 상해보험 할인 등 다양한 녹색 금융상품 출시('12~)
- 그린카드 운영 플랫폼 국내·국제 특허출원 추진(~'12.12)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조성을 위한 국고 지원('12.2~), 종량제 전면 확대(144개 지자체, ~'12년)

- 종량제 정착, 감량 효과 등을 분기별 평가·분석('12.1~)
-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매뉴얼' 마련·활용('12.1~)
- 아파트 부녀회 중심 주민자율 계도·단속반 운영('12.2~12)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대상 확대

-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시장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 적용 확대·강화
- 다량배출 음식점 면적기준을 확대·조정(125㎡→200㎡)하고 종량제 개념을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감축 유도
 - ※ 음식점 면적 확대시 39천개 업소(56%)가 종량제 대상으로 전환

□ 다량배출사업장 제도 개선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

-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12.상), 국회 제출('12.하)
 - ※ 주요내용 : 수집·운반 차량에 무게계량 장비 부착 의무화 등

물 절약

□ 그간의 지자체 물 수요관리 시책 평가('11.12~)

-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기 설치(수도꼭지+샤워기+변기), 중수도 시설, 빗물이용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들에 대한 목표 달성 점검
 - ※ 결과에 따라 실적 우수 지자체 포상, 부진 지자체 예산 차등지원 등 조치(언론 공표 검토)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12~'16) 수립, 추진

- '12년부터 '16년까지 국가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및 단계별(공급, 사용, 재이용)로 물 수요관리가 가능한 목표량 설정
 -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물 수요관리 목표 수립, 환경부는 이를 승인
- ⇒ 국가 물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
 - ※ 9개시·도 '11년말까지 승인, 7개 시·도 '12년 상반기 승인 예정
- 물 절약 어린이용 보조교재 활용학교 교재 시범운영(10개교) 등 물 절약 홍보 추진('12~)

3. 반기별 추진계획

1. '11년 하반기 완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뮤지컬(부활-골든데이즈) 공연('11.12) ▪ 대학생 녹색생활 실천 수기·아이디어, UCC공모전 개최('11.12)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11.11~12)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를 위한 워크숍('11.12) ▪ 물 수요관리 추진 성과 평가('07~'11) 및 전문가 평가회의('11.12)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12~'15)의 9개시·도 승인('11.12) ▪ 기업·공공기관용 그린 법인카드 출시 ('11.12)
2. '12년 상반기 완료 사항('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교육 전문가 등 인적 DB 구축 및 활용('12.1~) ▪ 민관 녹색생활실천 협의회 운영('12.1/4분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매분기 평가·분석(1/4분기) ▪ 종량제 관련 긴급조치 매뉴얼 마련(1/4분기), 주민자율 계도반 운영(1/4분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조성 국고 지원(1/4분기~) ▪ 그린캠퍼스 선정대학 총장협의체 구성·운영(1/4분기~) ▪ 환경교육센터 기준, 운영·관리방안 마련(1/4분기)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50건(누계 140건 이상, 2/4분기) ▪ 그린카드 기업·공공기관용 법인카드 출시(2/4분기)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2/4분기) ▪ 그린카드 운영 협의회의 개최(2/4분기) ▪ 유아용 환경교구 개발(5종, 2/4분기) ▪ 환경교육센터 지정(16개, 3/4분기)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12~'15)의 7개시·도('12년 상반기 승인)
3. '12년 하반기 완료 사항('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기반의 환경교육포털사이트 구축·운영(4/4분기) ▪ '푸름이' 환경이동교실 차량 증차(4/4분기)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60건(누계 200건 이상, 4/4분기)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12~'15) 12년도 실적 및 홍보실적 평가(4/4분기) ▪ 저탄소 그린캠퍼스 1차년도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4/4분기) ▪ 그린카드 발급량 및 실제사용률 제고(4/4분기)

(황색 간지)

지방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 및 활성화 방안

2011. 11. 28

행정안전부 수 원 시
증 평 군 대 전 서 구

(하늘색 간지)

지방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
- 2011 생생도시 우수사례 발표 -

2011. 11. 28

수원시 증평군 대전서구

별첨 PPT 자료 참조

(하늘색 간지)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2011.11.28

행정안전부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45
II. 추진실적	46
① 총괄 : 4대 분야 12개 세부과제	46
② 과제별 추진실적	47
III. 시사점 및 추진방향	51
IV. 향후 추진과제	52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08.8) 이후, 국가 녹색성장 정책기반 구축
- 지역에서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녹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 ※ 자치단체 녹색성장 조례 196개·규칙 9개 등 총 244개 제정

□ 그간 추진경과

- '09.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자전거 활성화 원년 선포
- '09. 5. '녹색성장 지방정책보고회' 개최(VIP와 시도지사 등 참석)
- '10. 2.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 완료
- '10. 12.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11년 상·하반기(5·10월) '지역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11. 3. '4대강 희망의 숲' 나무심기 행사(38개소, 80,105주 식재)
- '11. 11. 4대강 국토 종주, '남한강 자전거길(10월) 및 '새재길(11월) 개통
 - ※ (남한강자전거길) 남양주시 팔당~충주시 탄금대, (새재길) 충주시 탄금대~상주시 상풍교
- '11. 11. 4대강 친수공간 보존·활용을 위한 78개 자치단체 워크숍 실시

II. 추진실적

1 총괄 : 4대 분야 12개 세부과제

사업분야	정책 과제	지역 실천사례
1 녹색교통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 ▶ 친환경 교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지자체 에너지 절감형 차량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강·새재 자전거길 조성(남양주 등) ▪ 범시민 자전거타기 생활실천 사업(경북) ▪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및 운영(대구) ▪ 그린카 스마트 시티 구현(서울)
2 녹색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녹색길 조성 ▶ 4대강 친수시설 조성 ▶ 공중 화장실 중수도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관 편백건강숲길 조성(전북) ▪ 이포보 당남지구 친수시설 조성(경기) ▪ 친수 녹지 생태벨트 조성(광주) ▪ 공영주차장 화장실 중수도 설치(부산)
3 녹색생활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주체가 되는 녹색운동 추진 ▶ 녹색생활 실천 마을 육성 ▶ 공공청사 및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생활 탄소제로화 시범학교 운영(강원) ▪ CO2 줄이기, 초록마을 만들기(충북) ▪ 도심 공한지 텃밭 조성(제주) ▪ 기업 폐열을 이용한 지역 난방에너지 활용(인천)
4 녹색성장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녹색성장 재정 지원 체계 강화 ▶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로 평가체계 구축 ▶ 지역 녹색성장 성과 공유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충남) ▪ 녹색성장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전남) ▪ 녹색생활 실천프로젝트 공모발굴 확산(경남)

2

과제별 추진실적

1 녹색교통 확산

□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

- (남한강자전거길) 국내 최초 페터널 및 폐철도 활용(폐자원 활용 비용절감액 162억, 일 2천~5천명 방문)

<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 현황 >



- (새재자전거길) 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 기존 도로를 활용(도로 구축시 km당 비용절감, 4억→1억)

□ 친환경 교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당 최대 140만원 혜택)
 - ※ 하이브리드('09~'12, '12년 이후 감면연장 검토), 전기자동차('12~'14, 국회입법 추진중)
- 에너지 절약형 저공해 버스 취득세 100% 감면 조치(대당 약 200만원 혜택)
 - ※ '09~'12년까지 감면, '12년 이후 감면연장 검토

□ 지자체 에너지 절감형 차량 보급 확대

- 지자체 총 승용차 6,476대 중 에너지 절감형 차량 2,993대 (46.2%)* 교체 추진 * 하이브리드(746대), 전기차(34대), 경차(2,213대)
- 관용차량 교체조건 강화(지자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요청, '11.10)
 - (변경전) 내용연수 5년 → (변경후) 내용연수 7년 및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2] 녹색인프라 확충

□ 친환경 녹색길 조성

- 전국 80개소 974km 조성, 58개 방문객 지원시설 설치(800억)

< 친환경 녹색길 조성 현황 >



※ 11.30까지 30개소 완료 예정, 연말까지 전체 마무리 추진

- 4대강 36경 명소와 주변마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녹색길 20개(183km) 설치

□ 4대강 친수시설 조성

- 희망의 숲 38개소 조성, 20,405명 참여, 80,105주 식재

※ 교목 7,113주 중 883주(12.4%) 고사목 교체

- 파고라, 화장실, 주차장 등 친수공간 편의시설 57,602개(524억) 설치

□ 공중 화장실 중수도 시범사업 실시

- 세면대 이용 물을 재활용하여 수자원 절약 및 수질오염 방지

< 기 설치된 지역의 용수절감 및 탄소저감 효과 >

화장실명	재이용량 (㎡/일)	년간 재이용량 (㎡/년)	수도요금절감액 (원/년)	CO ₂ 저감 (kg/년)
다슬기 화장실(수원)	5	1,825	2,372,500	1,392.8
반딧불이 화장실(수원)	7	2,555	3,321,000	1,950.0
서수원 편의시설	10	3,650	4,745,000	2,785.7

- 11개 시도 16개소에 시범실시(개소당 40백만원, 12개소 완료·4개 추진중)

※ 전국 화장실 50% 설치시 약 5천 2백만톤/년(팔당댐의 1/5수준) 수자원 절감 효과

3] 녹색생활 실천

□ 국민과 함께 하는 녹색운동 추진

-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뽀뽀시 내복입기 캠페인' 전개(11.22)
- 범국민 3R자원(재사용, 재활용, 줄이기) 모으기 경진대회 개최(29,500톤, '11.1~9월)
- 가정생활용수 절약 등 "Clean Green 10" 추진(울산시, 시민 5명중 1명 가입)

□ 녹색생활 실천 마을 육성

-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 녹색생활 실천 마을 추진 현황 >



- '11년 96개 마을, 시도별 4~7개소, 마을당 평균 10백만원 지원
※ '10년 48개 조성 완료

□ 공공청사 및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감

- (공공청사) '11년 에너지·온실가스 △5% 감축 목표를 추진하여 '11.9월까지 12.9% 달성
 - LED 조명등 총 105,685개중 21,687개(20.5%) 교체
 - (민간건축물) 친환경 정책 및 에너지 절감을 국민 일상속으로 확산
 - 친환경 주택 신·증축시 취득세 5~15% 감면
 -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3~15% 차등과세 도입('11년 입법추진중)
- ※ 연간 28억여원(주택 50만세대 18억, 건축물 191동 10억) 세제지원 효과

4] 녹색성장 추진체계 강화

□ 지역 녹색성장 재정지원 체계 강화

- 교부세 수요산정시 녹색성장 항목 확대 및 지원예산 증액

< 교부세 수요 변경 현황 >

'10년 3개 분야 463억	➡	'11년 5개 분야 1,386억
• 자전거 도로 구축(159억)	➡	• 자전거 인프라 수요 강화(322억)
•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140억)	➡	•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지원(98억)
• 생활폐기물 절감(164억)	➡	• 녹색생활공간 및 문화조성, 생활폐기물 절감(216억)
-	➡	•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15억)
-	➡	•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735억)

□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로 평가체계 구축

- 지역의 녹색경쟁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지역의 녹색성장 역량 진단 ⇒ 4개 분야* 15개 지표 공표('10.4.15)

< 녹색경쟁력 지표 현황 >

분 야(4개)	녹색경쟁력 지표(15개)
녹색교통(3)	▶ 자전거도로 연장 실적 ▶ 천연가스버스 보급률 ▶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실적
녹색건축물(3)	▶ 지방행정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 ▶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실적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발전량 및 증가율
녹색생활일자리(4)	▶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가입 실적 ▶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적립 실적 ▶ Green 마을 점검 결과 ▶ 자치단체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실적
녹색기반(5)	▶ 녹색성장 조례 또는 규칙 제정 실적 ▶ 임야면적 증감률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 지방행정기관 재활용센터 설치 실적 ▶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 평가 후 부진사항 등은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확산 조치,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11.12월중)

□ 지역 녹색성장 성과 공유체계 강화

-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11년, 2회)
- 생활속 지자체 녹색성장 실천사례 발간 배포('11.7, 16개 시도 228개 지자체)
- ※ 생활속 녹색성장, 시도별 우수사례, 외국사례 등

Ⅲ. 시사점 및 추진방향

□ 시사점

-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08.8) 이후 지역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 결과,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반 확충
 - 중앙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한 지역 녹색성장 우수 사례가 창출되고, 타 지역으로 확산
 - ※ 자전거(창원, 상주), 걷는 길(올레길, 둘레길, 마실길), 슬로시티 생태관광(전남)
 - 희망의 숲, 친환경 녹색 길, 자전거 도로 등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녹색공간 조성
 - 중앙-지방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도·의지 등 지자체간 추진역량에 차이
- ⇒ 녹색성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의 녹색경쟁력 제고 필요

□ 추진방향

- ◆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과 지역발전 연계
- ◆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생활 속 녹색운동 정착
- ◆ 자치단체의 녹색전문성 제고로 지역 녹색추진체계 강화



**지역·민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으로
지역의 녹색성장 잠재력 확산**

IV. 향후 추진과제

1 4대강 친수공간 보존·활용과 지역발전 연계

□ 친수공간 유지관리체계 구축

- 친수공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지자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 (광역) 기본계획 수립 등 4대강 유지관리 총괄
 - (기초) 환경정비, 시설물 관리 등 실질적 집행업무 수행
 - 친수공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계별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체 구성'
- 관련 자치단체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확산

□ 친수공간 활용과 일자리 연계

- 재래시장·문화재 등 강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수변 관광 벨트를 조성,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친수공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예시) 〉

사업유형	주요사업	주요활용 아이템	참여인력
자전거 활성화	안전관리	▶ 시설 유지관리, 안전지킴이	기술 및 자격 소지자, 마을기업
	자전거 서비스	▶ 자전거 대여 및 수리소, 쉼터 운영	
생태교육체험	교육문화사업	▶ 생태공원, 자연습지 등	지역학교 관련협회, 단체 전문가 등
	생태체험활동	▶ 식물원, 생태체험장, 녹색길, 어류관찰시설	
레포츠·여가	수상레포츠	▶ 수상스키, 윈드서핑, 카누	관련협회, 단체 동호회, 마을기업
	여가활동시설	▶ 게이트볼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MT촌	
	수변 음식점	▶ 카페, 스낵바, 향토음식 판매점	
수변휴양관광	수변 숙박시설	▶ 콘도, 펜션, 호텔	
	수변관광	▶ 야외예식장, 유람선, 마리나	

- '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② 친환경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안전 강화 및 활성화

○ 자전거 이용 안전 인프라 및 시설 확충

- 자전거 안전표지 설치 등 자전거 교통체계 개선

※ 교차로 칼라포장, 자전거 유도램프, 볼라드 lighting 등

- 국가자전거도로망 구축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확산('10~'19, 2,175km)

▶ '10~'14년까지 통학, 출퇴근, 쇼핑 등이 용이하도록 도심생활형 도로로 건설

▶ '15~'19년까지 자전거 이용수요를 감안 점진적으로 전국을 네트워크화

○ 대학내 공공 자전거 인프라 구축

- '11년 건국대, KIST 등 7개 대학 선정, 자전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대학내 공공자전거 현황 >



- '12년도 6개 대학 추가선정 지원 등 총 12개 대학 지원 예정

○ 자전거 이용 홍보 강화

- 자전거 날(4.22) 등을 계기로 범 국민적 자전거 타기 붐 조성

※ Tour de Korea 2012 개최예정('12.4.22~29) - 서울 등 4대강 인접도시, 2,000km

- 자전거 동호회, 온라인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한 자전거 타기 캠페인 전개 및 저변 확산

□ 친환경 교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확대

○ 전기자동차 크기별 차등 과세 도입 추진

- 현행 단일세율(100천원) ➡ 3단계*로 구분하는 과세방안 마련(10.18)

* 경형 : 1,000CC이하, 소형 : 1,600CC 이하, 중·대형: 1,600CC초과

- 전기자동차 상용화('14년 예정)시기에 맞춰 '12년 법제화 검토

○ 친환경 자동차세 도입

- 승용차 과세기준을 현재 배기량(cc) 기준에서 연비 또는 CO₂ 배출량으로 전환 검토

□ 녹색길 이용 활성화

○ '12년 녹색길 400억(지방비 50% 포함)지원, 약 40개소 추가 조성

- '11년 조성된 녹색길을 대상으로 '걷고 싶은 녹색길 Best10'을 선정, 지자체 명품 녹색길로 홍보

- 녹색길과 연계하여 특산품 판매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1.5, 국회제출)

- 녹색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

③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

□ 녹색생활 실천 마을 육성

○ '12년 100여개 마을 선정, 마을당 1천~3천만원씩 예산 차등지원

- 마을 방문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주민참여 유도·확산

○ 전체 사업('10~'12, 210여개)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 개최 등 국민적 관심 제고 추진

□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강화

○ 정부, 지자체 청사 LED 조명등 30% 이상 보급 달성 추진(12년)

▶ (정부청사) 총 105,685개중 13,915개 교체(총34,549개, 32.7%)

▶ (자치단체) 총 997,764개중 256,593개 교체(총389,128개, 39%)

⇒ 부서장·부지사 회의 등을 개최하여 추진 독려

○ 에너지 과소비 지자체 청사(21개) 시설개선 권고(10.11)사항 이행 독려

구 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외
개선 전(21개)	0개(0%)	2개(9%)	6개(29%)	5개(24%)	8개(38%)
개선 후(21개)	2개(10%)	13개(62%)	3개(14%)	2개(9%)	1개(5%)

⇒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

□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

○ 지방 녹색위 등을 중심으로 가정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

- 일반 가정용으로 부과되는 전기, 가스, 석유 등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각종 캠페인 등을 추진

※ 전기공사, 석유공사, 가스협회 등을 통해 시도별 사용실적을 파악

○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실천 방법 등 교육 강화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 녹색생활 리더 육성, 녹색생활 의식 등 국민들이 실천하기 쉬운 녹색생활 실천

- 녹색생활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 개최

○ 새마을 운동 중앙회를 중심으로 녹색생활화 실천 운동 전개

▶ 에너지 절약 캠페인, 온(溫)맵시 내복입기 캠페인, 쿨맵시 시원한 여름나기

▶ 3R 자원재활용품 모으기 운동 추진, Green&Clean 국토대청결 운동

▶ 남은음식 포장해주고·포장해가요 「포포 캠페인」, 「그린 장바구니」 나누어주기

▶ 녹색생활! 친환경 상자 텃밭 가꾸기, 식목의 달 나무심기

4] 녹색성장 추진체계 강화

□ 지자체의 녹색성장 추진역량 제고

- 녹색성장 관련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전문성 강화
 - '10년 194회 23,774명 → '12년 200회 30,000만명 이상 교육 참여계획
 -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설명회 및 학계·전문가 특강 수시 개최
- 매년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평가결과를 공표, 지자체 참여 유도

□ 지자체의 녹색성장 관련 국제교류협력 강화

- ICLEI* 동아시아 본부를 유치, 해외 우수사례 습득기회 제공
 - *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 전세계 71개국 1,227개 자치단체 등 참여, UN의 국제환경 자문기구
-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포럼 개최로 지역의 녹색성장 성공 사례 국제적 전파 및 정례적 교류의 장 마련

□ 지방 녹색성장위원회 참여 제고 및 운영 활성화

- 지방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 녹색성장위원회와 각 지방위원회간의 간담회를 지속 확대하고, 관련자료를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는 메일링 시스템 구축
 - ※ 녹색위 주관 지역간담회 5회 실시('11.10~11월), '12.1월까지 11회 예정
 -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강화
 - ※ 녹색성장 문화 저변확산을 위한 개선과제 및 아이디어 발굴 등
- 지방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우수사례 보고대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 중앙-지방 연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우수사례 전파 확산(분기별)
 -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총리상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황색 간지)

제1차 녹색성장정책 이행점검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현황

2011. 11. 28

1. 공공건축 이행점검 후속조치 59
2. 그린카 이행점검 후속조치 71

관계부처 합동

(하늘색 간지)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이행점검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현황

2011. 11. 28

1. 교육과학기술부	61
2. 지식경제부	63
3. 환 경 부	65
4. 국토해양부	67

교육과학기술부
환 경 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I. 교육과학기술부 (그린스쿨 추진)

< 후속 추진 과제 >

- 재원 확보대책, 사업대상 선정기준, 시설개선 가이드라인 등 마련
 - (재원 확보) 특별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 확보
 - (기준 마련) 그린스쿨 정의와 기준, 대상사업 선정·평가기준, 시설개선 가이드라인 등 마련

1. 추진현황

- 그린스쿨 정의와 기준, 모범사업 발굴을 위한 현황조사
 - (정의) 기존 노후학교를 환경친화적 기법 및 에너지절감 기법 등을 적용하여 집중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학교(11.9)
 - * '12년 이후 사업은 친환경인증 4등급 취득 및 EPL(에너지성능지표)점수 65점 이상 획득 ⇒ 친환경인증 취득 및 EPL 점수 단계적으로 상향
 - 기 추진된 그린스쿨 현황조사 실시(10.24~)
 - 기 추진된 그린스쿨 현황조사·분석을 통한 모범사례 발굴
- 그린스쿨 소요재원 확보 추진
 - '12년 특별교부금 수요 신청(216억원) 및 관련부서 협의(9.29)
 - * '12년 특별교부금 조정안(그린스쿨 사업 : 16교, 192억원으로 조정)
 - 그린스쿨 소요액에 대한 재원 배분* 논의(지식경제부)
 - * (예시) 환경개선사업비 50%, 특별교부금 20%, 에스코 용자 등 30%

□ 전문기관 설치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친환경인증 전문기관인 비영리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관리기관 변경(9.30)

- 서울시 성동교육지원청 ⇒ 교육과학기술부(교육시설담당관)

* 현재, 기존 그린스쿨 사업 추진 학교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중

- 교육시설·환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10.5)

- 건축·환경·교육 등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시설환경자문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2. 추진계획

□ 기 추진된 그린스쿨 현황조사·분석 계속('11.10~12월)

- 현황조사 부진 교육청에 대한 협조요청 및 분석·평가 조속 마무리
- 기 추진된 그린스쿨에 대한 현장 점검(녹색위와 합동)

□ 그린스쿨 소요재원 확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계속('11.10~'12.3)

- 에너지진단, 신재생설비설치, 정책연구학교지원, 에스코 용자 등 소요재원 배분 및 확보에 관한 사항

□ 시설개선 가이드라인 마련('11.12월)

- 그린스쿨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 마련('11.12월)

-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 '12년 대상사업 선정, 추진상황 점검, 담당자 회의 등('12.3~)

- 그린스쿨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과 소요재원 확보 방안 마련 후 대상사업 선정,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실시

II. 지식경제부

< 후속 추진 과제 >

- (에너지효율등급 강화)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을 업무시설 외에 학교, 문화, 체육설 등 공공건축 전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에스코사업 확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보수 활성화를 위해 에스코사업 적용기준 완화 (투자비회수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LED 보급 확대)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촉진책 마련하고 신축 공공건축에 대하여도 30%이상 설치를 의무화(13년 시행)
- (기존 공공건축 리모델링 추진) 우체국에 대한 녹색리모델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1. 추진현황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강화) 유형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건설기술연구원, ~'11.12)
- (에스코 적용기준 완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
 - 개정안 내용 : 창호·단열을 포함하는 에스코사업은 투자비 회수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LED 보급 확대) '12년도 공공기관 LED보급 예산 정부안(285억원) 국회 예산심의 대응 및 보급추진방안 설명('11년 지원예산 : 80억원)
 - 신축 공공건축에 대한 LED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

2. 추진계획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강화) 학교시설 등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11.12)
 - 학교시설 등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개정('12.상반기)

- (에스코사업 적용기준 완화) 투자비 회수기간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11.12)

- (LED 보급 확대) '12년도 공공기관 LED교체사업 추진계획 수립('11.12) 및 LED 보급사업 추진 및 반기별 교체실적 점검
 - '13년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LED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11.12)

- (기존 공공건축 녹색리모델링 추진) 2012년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11. 12월)
 - 재건축 및 리모델링 우체국 추진 ('12. ~)
 - * 계획 (27국) : 재건축 24국, 리모델링 3국

Ⅲ. 환 경 부

< 후속 추진 과제 >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중앙부처가 소관분야에 대하여 중간 책임관리토록 이행체계 강화
- (공공건축 친환경건축인증 강화) 우선 2등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1등급 이상으로 확대
- (강릉 녹색도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17년 이후 추진 예정 사업들의 조기 추진방안 마련
- (녹색마을)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점검하여 실현가능한 범위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완

1. 추진현황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분야 공공건물 중간책임 관리 수행('11.9)
 -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보완 요구사항, 월별 배출실적 입력 등 중간관리
-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친환경 인증 의무화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11.15, 환경부·국토부·인증기관)
- 강릉 녹색도시 조성
 - 강릉 녹색도시 조성사업 제4차·제5차 공정회의 개최('11.9, '11.10)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가시적 성과를 위해 세부공정 관리 및 예산 집행률 제고방안 등 논의

□ 저탄소 녹색마을

- 녹색마을 조성사업 통합 추진방안 마련(11.10, 행안부 등 4개부처 협의)
 -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체계, 지원강화 및 장기계획 등 개선방안 마련

2. 추진계획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목표관리제 중간책임기관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개정(11.12)
- 기관별 2011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 평가 및 국무총리 보고(12년)

□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친환경 인증 의무화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개정(11.12)

□ 강릉 녹색도시 조성

- 2018 평창올림픽과 연계, 강릉 녹색도시 조기건설을 위해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추진(11.12, 관계부처 회의)
-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그린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 사업 등 완공(12.12) ※ 총 29개 사업 중 '12년말 9개 사업 완료

□ 저탄소 녹색마을

-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 추진체계 보완방안 마련(11.12)
-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주민, 전문가 공동 참여
 -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기술적 신뢰를 제고하여 사업 정상화

IV. 국토해양부

〈 후속 추진 과제 〉

- 친환경·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강화 및 대상 확대
 - 기준강화를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 (11.12)
 - 2등급 의무화를 위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11.12)
- 공공건축의 설계·관리 제도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 공공건축 입찰시 녹색건축 실적 인센티브 부여 확대 (11.12)
 - 공공건축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용역 및 방안 마련 (12.6)
 - 도시 조성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택지업무지침 개정 (11.12)
- 혁신도시 시범사업 예산협의를 및 시범사업 추진 (11.12/12.6)
-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강화
 -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11.12)
 - 녹색건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12.6)
 - 민간 건축물 녹색 리모델링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및 녹색 건축 R&D 확대방안 마련 (11.12) * 총리님 지시사항

1. 추진현황

- 친환경·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강화 및 대상 확대
 -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2등급 이상 인증 취득 의무화 방안 검토·협의(10. 13, 환경부 공동)
 -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검토
 - (에너지효율등급) 기존의 업무시설·공동주택 인증에서 교육·문화시설 등 공공건축물 인증대상을 확대
 - 인증등급 세분화(1등급 상향조정) 등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 및 시뮬레이션 진행(10. 14, 지경부 공동)

□ 공공건축의 설계·관리 제도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 (인센티브 확대) 공공건축 입찰시 녹색건축 실적을 기술제안 (TP) 평가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 위한 평가메뉴얼 개정(안) 의견수렴
- (관리제도 정비) 공공발주시 녹색건축의 경우 기술제안 입찰 방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확산
 - * 국방부, 조달청, 서울시 등 13개 주요 발주기관 정례협의회시 사례발표 : 토지주택공사(LH, 6.29),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10.26)
- (지침개정) 택지업무지침에 건축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을 택지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개정 완료('11.9)

□ 혁신도시 신축청사 시범사업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 (신축청사) 7개 기관에 대한 '12년도 예산반영 ('12년 105억)
 - * 시범사업 : 총 10개 기관, '12~'13년 총사업비 500억원
- (재정지원) 공공건물의 녹색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12.2)를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 * 2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수요조사, 예산지원 방안, 시범사업 선정기준 등

□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강화

- (인센티브 강화) 에너지효율등급·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고도 완화) 부여
 - * 건축법 시행령 개정(법제처 심사, '11.11.14)
-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건축물 용도별 그린리모델링 기준·기술매뉴얼 개발을 위해 사전연구* 추진 및 착수보고(9. 20)
- (금융지원) 민간 건축물 녹색 리모델링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원방안 마련

- (녹색건축 R&D)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R&D 중장기 계획 및 시장 수요기반 녹색건축물 실용화 연구 추진

* 기획연구에 이은 「시장 수요기반 녹색건축물 실용화 연구」 공모(10. 30)

2. 추진계획

□ 친환경·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강화 및 대상 확대

-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11.12, 환경부 공동),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개정(11.12, 지경부 공동)

□ 공공건축의 설계·관리 제도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매뉴얼 개정 (11.12)
- 입찰심의회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지속적으로 권장

□ 혁신도시 신축청사 시범사업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12.1~3)하고 녹색시범사업 추진(12.3~)
-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11.11~12.2)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12.4) 후 기재부 예산협의(12.5~) 추진

□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강화

- 에너지 효율등급·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공포(11.12)
- 사전연구(11.9~12.2) 및 R&D를 통해 용도별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및 기술매뉴얼 개발·보급(~12)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금융지원은 사전연구(11.11~12.2)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12.4) 후 기재부 예산협의(12.5~) 추진

(하늘색 간지)

그린카 산업발전을 위한 이행점검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현황

2011. 11. 28

1. 지식경제부	73
2. 환 경 부	77

지 식 경 제 부 환 경 부

I. 지식경제부

< 후속 추진 과제 >

가. 전기차 개발

- 준중형 전기차 개발을 당초 '16년에서 '13년말 완료로 단축
- 전기차의 높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저가형 전기차 개발” 추진
 - 동급 가솔린차 대비 가격이 유사하고, 성능은 고속 전기차 (BlueOn급)와 동일한 수준의 전기차 개발 목표로 추진('12~'13)
- 수도권에 전기차를 활용한 Car Sharing 시범사업 시작('11말~'12말)

나. 전기차 충전인프라

- 부처합동 전기차 충전인프라 로드맵 구축(~11.10), 수도권지역 등 주요 거점 내 전기차 운행에 필요 최소한의 민간충전기 구축('12~'13)
- 전력부하를 관리하고, 충전소 위치정보와 과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인프라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12년, 15억원)

다. 제도 개선

- (표준화·인증)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조속한 표준 제정 추진
 - * 급속 충전기 표준(~'11.9), 전기차 연비 측정법 관련 인증시스템 구축('11.12), 전기차 주요부품 표준 제정('12.12), 표준협력 체계 확대('11.9~)
- (세제지원 차종확정)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11.9)

라. 기타사항

- 충전인프라 구축시 민간 투자 유도 방안 강구 * 총리님 지시사항

1. 추진현황

가. 전기차 개발

□ 준중형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관련 정상 추진

-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을 통해 분기별 진행상황을 점검

□ “저가형 전기차 개발” 과제 기획 중으로 정상 추진

- 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일정을 준용하여 과제기획 중

* 이후 사업자 공고('12.6) → 사업자 선정('12.7) → 사업 완료('13) 예정

나. 충전인프라

□ (구축 로드맵) “국가전기차 충전기 구축 로드맵”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중임

* 민간 충전인프라는 지경부가, 공공 충전인프라는 환경부가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11월내 구축 로드맵 마무리 예정

□ (Car Sharing)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를 개시하는 등 정상 추진('11.10)

- '11.12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12.6월 시스템개발 및 충전기 구축 이후 7월부터 본격 서비스 개시 예정

□ (민간충전기) 민간분야 충전기 구축을 위한 신규 지원 정상 추진

*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30억원 확보 논의 중

- (정보시스템)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
- 전기차충전시 전력망에 대한 부하관리와 충전소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 편의를 극대화

다. 제도개선

- (표준화·인증) 급속충전기 표준 마련 등 예정대로 진행
 - (전기차 표준)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표준화 및 전기차 주요부품 표준 제정을 추진 중 (~12.12)
 - (충전기 표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급속(직류) 충전시스템의 안전성과 관련된 표준을 제정 마무리 단계(11.11)
 - * 직류충전기에 대한 국제표준은 아직 미정
 - (협력체계) 전기차 충전을 총괄하는 SG 표준화 포럼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 (11.9.2)
 - 同포럼은 6개 상임워킹그룹과 9개의 도메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표준을 확정
- (세제지원 차종 확정)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 공통기준」 고시를 완료함 (11.10.13)
 - 同기준은 저속·고속 전기차로 분류하고,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기준과 기술적 세부 사항을 규정

라. 기타사항

- 충전인프라 구축시 민간투자 유도방안 계획 정상 추진 중
 -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시 매칭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 상기내용을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사업 중 지능형 운송에 반영하여 지원 추진 예정 (국회에결위를 통해 30억 반영 추진)

2. 추진계획

- (전기차 개발) 12년까지 고속전기차 2종 신규 출시(기아 탐, 르노 삼성 SM3) 추진
 - * '13년말까지는 준중형급·저가형 전기차를 개발 완료 예정
- (충전 인프라) 주요 거점에 5km('13년 2km) 범위 내에서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충전인프라 체계 구축 ('12년~'13년)
- (표준화·인증) 전기차 5대 핵심부품*에 대한 표준화와 인증 및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표준화 등 4종 국가표준 추진 제정 (~'12.12)
 - * 충전기, 배터리, 모터 및 공조시스템 등
- 다만, 국제표준과 국내표준 괴리시 수출 애로가 우려되므로, 국제표준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표준 제정 추진
- 공동형 홈충전기 및 멀티포트 충전기, 저가형 전기차 등 12년 주요 R&D과제를 차질없이 기획 및 추진

II. 환경부

< 후속 추진 과제 >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11년도 보급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이행점검 강화
- '1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와 범위 확대
 - * 총리님 지시사항
- '12년도 보급 수요 발굴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

- 전기차 보급 유인을 위한 공공충전기 구축 전략 수립

□ EV 선도도시 선정·운영

- 1차 선도도시 현황 점검 및 운영방안 개선, 2차 선도도시 선정

1. 추진현황

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11년도 보급현황) 전기자동차 보급수요 559대 확보

* 목표 540대 대비 104%, 민간보급 저속차 59대 포함

-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335대 보급 추진 중**(237대 계약 완료, 98대 계약절차 진행 중, 11.15 기준), 충전인프라 구축일정에 맞춰 **12월 말까지 500대 보급**

*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전망 : 11대(8.31) → 28대(9.30) → 135대(10.31)
→ 237대(11.15) → 335대(11.30) → 500대(12.31)

□ ('12년도 재정규모) 정부예산안 610억(전기자동차 2,500대) 반영

- 기재부 1차 예산심의(249억, 1,000대) 대비 145% 증액

*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기준 150%(1,000대 → 2,500대) 증가

□ ('12년도 수요 발굴) 공공서비스 분야(교통,통신,전기 등) 추가 발굴, 2,132대 전기자동차 수요 확보

* 수요발굴 : 5월 1,013대 → 10월 1,757대 → 11월 2,132대(목표대비 85% 공공서비스 포함)

□ (보급모델 다양화) 수요확대 · 민간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신규 보급모델 개발 추진

- 국립공원내 탐방용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렌터카 프로그램 개발, “빌려타는 자동차” 카셰어링사업 확대 등

* 국립공원 관계자회의(10.14), 렌터카업계 회의(11.4,11.10), 카셰어링 참여의향 업체 간담회(11.8) 등 보급확대 전략개발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나. 공공충전인프라 구축

□ ('11년도 충전기 구축) 충전인프라 493기 구축 예정(목표대비 205%)

-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구매기관 대상 주·월간 집행실적 점검

□ ('12년도 충전인프라 구축 전략) “전기자동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중

□ (정보시스템) 공공충전인프라정보시스템 구축('10.10) 및 실증테스트 중('10.12 ~ '11.12)

- 충전기(16대) 대상 위치정보·충전정보 수집 및 성능테스트 중

다. EV 선도도시 선정·운영

- (1차 선도도시) 관계부처 합동 추진현황 점검(10.28)
 - '12년 추진 사업 보고(서울시 전기버스 운행 및 카셰어링 추진, 제주 전기렌터카 사업 추진 등)
- (2차 선도도시) 광주광역시, 충남 당진군, 경남 창원시 선정(11.4)
 - '11년 추가수요 53대 발굴 및 '12년 전기차 보급모델* 개발 추진
 - * 전기자동차 시티투어(광주시), KTX, 고속버스터미널 연계 카셰어링(창원시), 순회 보건진료 등 근거리 이동형(당진군) 등 신규 보급모델 개발

2. 추진계획

- ('11년 전기차 보급) 연내 '11년도 예산 전액 집행, 559대 보급 완료
 -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셔틀버스(2대, 11.26), 서울시 41번 순환노선(11대, 12월중) 등 홍보효과가 높은 전기버스 운행 개시
- ('12년 전기차 보급) 정부,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수요 지속 발굴
 - 기관평가시 전기자동차(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반영 추진 등
 - 공공부문 임대차량 수요 확보를 위한 렌터카 프로그램 마련
-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12~'20)」 수립('11.11)
 - 충전인프라정보시스템 개발완료, 실증테스트 예정('12년 초)
 - * '11년 구축된 493대 충전기의 위치정보·사용정보 제공 예정
- (EV 선도도시 선정·운영) 광역권별 충전인프라 확충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선도도시 추가 지정(4개, '12년 초)
 - * '12년 6개 선도도시 전기차 수요 총 1,104대(카셰어링 20대, 전기택시 30대 등)